

광산구, 시민·공직자 대상 인권 실태조사 분석

“3년간 인권 존중 개선” 65.7%
인권 관련 행정 만족도 62.1%
지난 1년간 인권침해 경험 6.3%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인권 행정·정책에 대한 시민·공직자의 만족도가 60%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광산구는 지난 15일 구청 7층 윤상원 홀에서 ‘제3기 인권 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주민공청회를 열어 시민·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

렴했다.

조사는 인권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광산구는 지난 5월15일부터 6월15일까지 한달간 온라인으로 광산구 시민 1987명, 공직자 264명을 조사했다.

‘3년 전과 비교해 인권이 존중받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선 긍정 응답이 65.7%로 조사됐으며 인권 관련 행정 및 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62.1%였다.

지난 1년간 직접 인권침해를 경험한 시민은 6.3%, 목격한 시민은 16.1%로 나타났다.

주요 침해 유형으로는 성별·성적 관련

인권침해(39.9%), 출신 지역·국적(31.8%), 고용·노동(30.5%), 나이(29.8%) 등이 있었다.

광산구 공직자 인권 실태조사에서는 인권 행정 및 정책 만족도가 60.8%로 집계됐다.

공직자들은 인권과 관련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89.0%)와 ‘차별받지 않을 권리’(42.8%)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 증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인권 친화적 무장에 도시환경 조성, 치안 안전 개선, 인권 교육 강화 및 인권 친화적 문화 조성, 아동·청소년 안전 지원 등을

제안했다.

광산구는 이날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인권 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청취했다.

광산구는 9월 연구용역을 완료할 예정으로, 주민공청회 결과를 인권 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실태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시민, 공직자의 인권 인식을 높이고,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일상을 실현하기 위한 인권 정책 체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철 기자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 ‘맞선’ 남구-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광역시 남구가 관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전남제주지역본부와 손잡고 골목형 상점가 및 전통 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5일 골목 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남구청과 소진공 광주전남제주지역본부간 업무협약이 구청 1층 열린 민원실에서 열렸다.

남구와 소진공 광주전남제주지역본부는 협약 체결에 따라 다채로운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관내 어디서든 온누리상품권이 유통되도록 상권이 형성된 전 지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각종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률도 확대하기로 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2000㎡ 내에 소상공인 운영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한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올해 6월말 기준으로 관내에는 총 20곳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상태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4분기에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공동 프로모션 진행과 함께 관내 야시장 및 지역 행사와 연계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도 전개할 예정이다.

이정준 기자

광산구 ‘노인 방문구강건강관리’ 보건복지부 주관 시범사업 선정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보건복지부 주관 ‘노인 방문구강건강관리 시범 사업’에 선정돼 보건소 치과 전문 인력이 어르신들의 집을 방문해 구강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구강건강관리 접근성을 높이고, 어르신들이 스스로 구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광산구는 치과의사와 치위생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구강 상태를 진단하고, 구강 위생 상태와 구강건조증 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개별 맞춤형 구강 계획 수립 후 △구강위생관리 △구강 내·외 마사지 △혀 운동과 입 체조 교육 △불소 도포 등 다양한 예방 중심의 서비스를 총 3회에 걸쳐 제공한다. 지속적인 사후 관리도 병행한다.

지원 대상은 광산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거동 불편 어르신 중 일상생활 동작(ADL)이 어려운 사람을 우선 선정한다.

총 50명의 대상자를 선착순 모집하며, 신청 및 문의는 우산건강생활지원센터 구강보건팀으로 하면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현장에서 만난 어르신들 대부분 구강 불편을 참고 있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걸으로 찾아가는 공공의료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김상철 기자



서구, 초복 맞이 복달임 무료특식 봉사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이 초복을 앞두고 16일 서구 서빛마루시니어센터 시니어레스토랑에서 센터 이용 어르신들에게 삼계탕 배식봉사를 하고 있다. 광주 서구청

북구, 전국 최초 ‘전국민 주치의제’ 시범운영

주민 맞춤형 1차 의료체계 구축

광주광역시 북구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전국민 주치의제’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전국 최초로 ‘북구형 주치의제’ 시범운영에 나선다.

16일 북구에 따르면 ‘전국민 주치의제’는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맞춤형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1차 의료기관 의사를 개인별 주치의로 지정해 주민들에게 포괄적이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에 북구는 이재명 정부 기본의료 가치 실현을 위해 ‘북구형 주치의제’를 선제적으로 운영해 국정추진 동력을 확보

한다는 방침이다.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앞서 추진 방향 설정과 정책모형 구상을 위해 지난달 보건소장을 단장으로 하고 △북구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건강보험관리공단 등 의료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건강 주치의제 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정과제를 마련 중인 국정기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북구형 건강주치의제’ 로드맵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오는 9월 중 최종 결과를 보고 받을 예정이다.

특히 18일에는 지역 내 주치의제 추진분위기 확산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전국민 주치의 시범사업 실행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행복여울림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문인 북구청장과 각계 의료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종환 인하대 교수의 기조 강연과 오주환 서울대 교수가 진행하는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북구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북구형 전국민 주치의제’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 구성 및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뒤 본격적인 운영에 나설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일상에서 밀접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이 건강한 북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승우 기자

서구, 인공지능 활용해 교통혼잡 해소

광주광역시 서구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교통 혼잡 문제 해결에 나선다.

16일 서구에 따르면 이날 서구청 나눔홀에서 광주시, 광주경찰청과 함께 ‘AI 기반 스마트교차로 구축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이강 서구청장을 비롯해 양부남 국회의원, 고광안 광주시 행정부시장, 박준성 광주경

찰청 생활안전부장 등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교통 혼잡이 심각한 회재로 구간 내 주요 교차로 6곳에 AI 영상 분석 기반 교통정보 수집 장치를 설치해 차량 흐름, 신호 대기시간, 보행자 수 등 다양한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교통신호 체계를 최적

광주시·경찰청과 업무협약 AI교통정보 시스템 도입

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서구는 AI 기반 교통정보 수집 장치 설치 등 인프라 구축을 담당하고, 광주시는 시설물 유지·관리 및 교통정보 관리·공유를, 광주경찰청은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교통신호 체계의 최적화 작업을 담당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축적된 교통정보는

향후 광주시의 종합 교통 정책 수립 및 도심 교통개선 계획에도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이번 시점사업은 서구를 넘어 광주시 전체 교통체계의 디지털 전환을 여는 시작점”이라며 “서구가 제안하고 광주시와 경찰청이 함께 협력하는 3자 협업 모델이 광주의 미래 교통정책 표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승우 기자